



2019 ISSUE REPORT

# 이슈보고서

지역연구팀

VOL.2019-지역이슈-5-(2019.12)

## 서방의 대러 제재와 러시아 경제 변동



### CONTENTS

- I. 서방의 대러시아 제재의 배경
- II. 서방의 대러시아 제재의 내용
- III. 대러 제재 시행과 러시아 경제 변동
- IV. 러시아의 대응과 향후 전망

### 작성

선임연구원 조영관 (6255-5759)

ykj@koreaxim.go.kr

※본 보고서의 내용은 담당 연구원의 주관적 견해로, 한국수출입은행의 공식입장과는 무관합니다.

한국수출입은행 | 해외경제연구소



## <요 약>

### 서방의 대러 제재의 시행 배경

- (대러 제재의 시행)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크림반도 병합과 동부분리 자치지역에 대한 지원에 따라 미국, EU로부터의 제재 시행
- (대러 제재 추가 시행) 말레이시아 항공기 격추, 시리아 내전, 스크리팔 독살 시도, 아조프해 통항 제한 등 일련의 러시아 정부가 관련된 사건발생으로 추가 제재 시행

### 서방의 대러 제재의 내용

- (개인에 대한 제재) 러시아의 주요 정치인이나 기업가 및 기업에 대해 시행: 제재 대상 인물에 대한 미국 내 입국금지, 미국인 또는 미국 기업과의 거래 금지, 미국 내 자산 동결 등의 조치
- (산업부문에 대한 제재) 러시아의 주요 산업부문인 금융부문, 에너지, 방위산업 등에 대해 제재 시행

### 서방의 대러 제재 이후 러시아 경제

- (외국인직접투자) 제재 시행 이후 러시아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 규모는 전반적으로 감소하였으며, 이는 세계 경기침체와 대러 제재의 영향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
- (금융시장 변동) 제재 시행 이후 주가, 국채이자율 등 러시아 금융시장은 급격히 변동하였으며, 2016년의 유가상승으로 러시아 경제가 회복되며 안정
- (에너지 개발 프로젝트) 서방 에너지 기업들인 엑손모빌, 토탈, 쉘 등의 러시아 에너지 부문에 대한 투자 중단 또는 연기 사례 발생

### 러시아의 대응 정책

- (수입대체정책) 에너지 개발 및 군수 관련 부품 등을 비롯한 제재 대상 품목에 대한 국산화 정책 적극 추진
- (대외 협력정책) 중국, 인도, 터키, 베트남 등 비서방 국가들과의 협력: 특히, 중국과의 협력을 통한 에너지 개발 분야에 대한 투자 유치, 양국 투자 펀드를 활용한 공동 투자 추진

### 우리에 대한 영향

- (투자 제한) 한국은 공식적으로 대러 제재에 동참하고 있지 않으나, 미국의 2차 제재에 따라 제재 대상 개인이나 기업이 지분을 보유한 투자 프로젝트 등에 대한 참여에 영향
- (금융협력 제한) 2차 제재의 영향으로 제재대상 러시아 금융기관과의 협력 제한
- (교역 영향 미미) 교역 제재 대상은 에너지 개발 장비 및 군수품 등 전략물자 등으로 기존의 한국의 대러 주요 교역 품목과는 차이가 있으므로 대러 교역에 대한 제재의 영향은 미미



## I. 서방의 대러시아 제재의 배경

- **(대러 제재의 직접적 배경)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크림 반도 병합과 동부 지역 분리 지원**
  - (크림 반도 합병) 러시아가 2014년 3월 21일 우크라이나의 크림 반도를 자국 영토로 공식적으로 병합하자, 미국과 EU 등 서방 국가들은 이를 국제법 위반이라고 비판하고 경제 제재 조치를 시행하였음(미국, EU 외에 노르웨이, 스위스,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캐나다, 일본 등이 대러시아 제재에 참여).
  - (동부분리 지역 지원) 러시아계 주민이 다수 거주하는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에서 우크라이나 정부군과 독립을 추진하는 분리주의 세력 간에 내전이 발발하였으며, 러시아 정부가 분리주의 세력을 지원함에 따라 서방의 제재 조치가 시행됨.
- **(러시아의 크림 반도 병합 및 동부분리 지역 지원 이유) 명목상으로는 러시아계에 대한 지원이며, 실질적으로는 우크라이나의 급격한 친서방화에 대한 대응**
  - (러시아계 지원) 러시아 정부는 크림 반도가 과거 러시아의 영토로, 크림 반도와 동부 지역 인구의 대다수가 러시아계 주민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지역 주민들이 러시아와 합병하거나 우크라이나로부터 독립하기를 원한다는 점을 크림 반도 합병과 돈바스 지역 분리 지원의 근거로 내세우고 있음.

### 크림 반도와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 주민들의 독립에 대한 투표 결과

#### ▶ 크림 반도

- 2014년 3월 11일의 투표 결과 크림 자치공화국 의회의 약 78% 의원이 독립 결의안에 찬성하여 크림 자치공화국과 세바스토폴이 우크라이나로부터 독립 선언
- 3월 16일, 러시아 귀속에 대한 찬반 여부를 묻는 주민투표 결과, 크림 자치공화국과 세바스토폴 특별시 주민의 95% 이상이 찬성<sup>1)</sup>

#### ▶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

- 2014년 5월, 우크라이나로부터의 독립 의사 여부를 묻는 주민투표가 실시되어 도네츠크에서는 89.7%, 루간스크 공화국에서는 96.2%의 주민이 독립에 찬성

- (우크라이나 친서방 정책에 대한 위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문제에 대한 러시아의 개입의 실체는 2014년 초 우크라이나에서 친러시아 성향인 야누코비치 前대통령이 탄핵되고 친서방 정부가 수립된 이후 우크라이나의 친EU 및 반러시아 정책 가속화에 위기감을 느낀 러시아의 대응이라고 할 수 있음.

1) www.rt.com



<표 1> 역대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대외정책 성향

대통령	재임기간	대외정책
크라브추크	1대: 1992~94년	친러시아
쿠츠마	2·3대: 1994~99년, 1999~05년	친러시아
유센코	4대: 2005~10년	친서방
야누코비치	5대: 2010~14년	친러시아
포로센코	6대: 2014~19년	친서방
젤렌스키	7대: 2019년~현재	친서방

자료: 각종 자료 참고 저자 작성

- 서방의 대러 제재 확대: 말레이시아 항공기 격추, 시리아 내전, 스크리팔 독살 시도, 아조프해 통항 제한 등 일련의 사건 발생으로 추가 제재 시행
- 2014년 크림병합 및 동부지역의 내전 개시 이후, <표 2>에서와 같이 말레이시아 항공기 격추, 러시아의 시리아 내전 개입, 영국에서의 스크리팔 부녀 독살 시도 등 러시아와 서방 간의 관계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건들이 이어짐. 이외에도 러시아의 미국 대선 개입 의혹도 대러 제재 확대에 영향을 주었음.

<표 2> 러시아와 서방의 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준 주요 사건일지

사 건	일 시	사건 내용
크림 반도 병합	2014.2~3월	친러시아계 무장세력이 우크라이나 공공기관 점령
우크라이나 동부 분리 독립운동	2014.4월 이후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이 우크라이나로부터 분리 및 자치 선언
말레이시아 항공기 격추	2014.7월	말레이시아 항공기가 우크라이나 도네츠크 주에서 격추되어 승객과 승무원 전원(298명) 사망 :분리주의 반군 세력의 소행으로 추정
시리아 내전	2015.9월	시리아 내전에서 러시아군이 시리아 정부군을 지원하여 반정부군 공격
영국 스크리팔 독살 시도	2018.3월	영국에서 발생한 러시아 출신 이중간첩 세르게이 스크리팔과 그의 딸 율리야의 독극물 중독 사건에 러시아 정부의 개입 의혹
아조프해 통항 제한	2018.11월	크림 반도 인근 케르치 해협에서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함정들을 나포

자료: 각종 자료 참고 저자 작성



## Ⅱ. 서방의 대러시아 제재의 내용<sup>2)</sup>

### 1. 서방의 대러시아 제재

#### 주요 대러 제재의 시행 일자

- 2014년 3월 이후 서방의 대러 제재가 시행되어 왔으며, 다음의 <표 3>은 미국의 주요 제재와 그 영향에 대한 것임.

<표 3> 미국의 대러시아 주요 제재 시행과 내용

시행일	제재의 명칭	영향
2014.3.6.	대통령 행정명령 제13660호	제재 대상자의 미국 내 입국금지, 미국인 또는 미국 기업과의 거래 금지, 미국 내 자산 동결
2014.3.16.	대통령 행정명령 제13661호, 제13662호 공포	11명의 러시아 유력 정치인 및 방산관련 종사자에 대한 제재
2014.4.28.	국무부 공식성명 '러시아에 대한 수출 제한 확대'	전략물자(방산물자, 기술, 서비스)의 대러시아 수출 금지
2014.7.16./9.12.	대통령 행정명령 제13662호 지침(Directive 1, 2 공포 및 SSI 등재자 발표)/ 대통령 행정명령 제13662호 지침(Directive 3, 4 공포 및 SSI 등재자 발표)	금융, 에너지, 방산 부문에 대한 제재
2014.12.18.	우크라이나 자유지원법(Ukraine Freedom Support Act) 제정	러시아 군수물자, 에너지, 금융 부문 등의 기업을 지원하는 외국 기업 및 금융기관 제재
2017.8.2.	미국의 적국에 대한 제재를 통한 대응법(Countering America's Adversaries Through Sanctions Act, CAATSA) 발표	기존 금융 및 에너지 관련 제재 강화 : 북한, 러시아, 이란에 대한 통합적 제재
2018.8.27.	1991년 생화학무기 통제 및 전쟁종식법(CBW Act)에 따른 신규 제재	국가 안보와 관련된 부문 및 기술의 대러시아 수출 금지
2018.9.12.	선거개입과 관련된 대통령 행정명령 제13848호	미국 선거에 대한 외국정부의 개입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관련된 기업이나 개인에 대한 미국 내 자산동결 및 추방
2018.9.20.	CAATSA 관련 대통령 행정명령 제13849호 공포, 중국의 러시아 무기 구입 관련 2차 제재 및 SDN 등재자 추가 발표	사이버 안보, 방위 및 정보 분야 거래

자료: 「미국의 대러시아 경제제재와 한국기업의 대응방안」, 류혜정, 『수은해외경제』 2018년 겨울호 등 참고 작성

2) 이 글은 대러 제재를 시행하는 서방 국가들 가운데 제재 주도국인 미국의 제재에 대해 주로 다루고 있음.



## 러시아 기업 및 기업가에 대한 제재

- 2014년 3월 최초의 제재가 러시아의 주요 정치인이나 기업가 및 기업에 대해 시행되었으며, 이는 국제사회에서 러시아의 이미지에 심대한 부정적 영향을 주었음.
- 제재 대상 인물에 대해서는 미국 내 입국금지, 미국인 또는 미국 기업과의 거래 금지, 미국 내 자산 동결 등의 조치가 취해짐.
- 제재 대상에는 <표 4>와 같이 러시아의 주요 정치인, 관료, 대기업 회장, 푸틴 측근 인물 등이 포함되었으며 점차로 대상명단이 추가됨.

<표 4> 미국의 대러시아 제재 대상 주요 개인과 기업

분야	주요 내용	주요 대상
개인 및 기업에 대한 제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산 동결 및 입국제한</li> <li>- 자산 및 수익의 이전, 지급, 수출, 인출 및 기타 거래 제한</li> <li>- 제재 대상인 개인이 50% 이상의 지분을 소유한 기업에 50% 이상의 지분을 직·간접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위와 같은 제재가 취해질 수 있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치인 및 고위 관료: 이바노프(대통령실 행정실장), 볼로진(대통령실 행정부실장), 코작(부총리), 로고진(부총리), 나르쉬킨(하원의장), 악쇼노프(크림 자치공화국 총리), 야누코비치(전 우크라이나 대통령), 콜로콜체프(내무장관), 줄로토프(국방장관), 우스티노프(남부 지역 대통령 전권특사) 등</li> <li>- 기업인: 밀러(가스프롬 대표이사), 세친(로스네프트 회장), 보그다노프(수르굿네프트가스 대표이사), 데리파스카, 케리모프, 로텐베르그, 샬로프(시부르 주주, 푸틴 대통령 사위), 백셀베르그(레노바 그룹 이사회 의장), 코스틴(VTB 은행 이사), 야쿠닌(철도공사 사장) 등</li> <li>- 푸틴의 최측근들: 팀첸코, 코발추크, 아르카디 로텐버그, 보리스 로텐버그 등</li> <li>- 대기업: Basic element, EN+ Group, GAZ Group, Renova Group 등</li> </ul>

자료: 각종 자료 참고 저자 작성

## 주요 산업분야에 대한 제재

- 서방의 대러 제재는 러시아의 금융 부문, 에너지, 방위산업 등에 대해 시행되고 있음.
- 금융기관에 대한 제재는 러시아의 외국 자본 도입을 제한하며 외국 금융기관의 러시아 금융기관과의 협력을 제한하여 러시아 경제에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함.
- 또한 러시아의 주력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에너지, 군수 부문에 대한 외국의 금융제공, 외국과의 교역 제한은 제3국들의 러시아에 대한 투자와 수출 등에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표 5> 러시아의 주요 경제부문에 대한 서방의 제재 내용

분	야	주요 내용
금융거래 제한	금융서비스 분야 기관(단체)	제재 대상에 포함된 러시아 금융기관 : 만기 14일을 초과하는 대출이나 기타 부채 발생 행위 금지, 신규 자본거래 금지 (스베르뱅크, VTB, 가즈프롬뱅크, 브네쉬에코노믹뱅크, 뱅크 모스크바, 로셀호즈뱅크 등 주요 국영금융기관)
	에너지 분야 기관(단체)	제재 대상 러시아 에너지 기업 : 만기 60일을 초과하는 대출이나 기타 부채 발생 행위 금지, 신규 자본거래 금지 (로스네프트, 노바텍, 가즈프롬, 루코일, 트랜스네프트, 수르 롯데프트가스 등 주요 국영 에너지 기업)
	방위산업 분야 기관(단체)	제재 대상 러시아 방위산업 기업 : 만기 30일을 초과하는 대출이나 기타 부채 발생 행위 금지, 신규 자본거래 금지 (오보론프롬, 연합항공제조사, 통합조선회사, 우랄바곤자보드 등 주요 국영 방위산업체)
특정 부문에 대한 교역 및 투자 제한	석유 개발·생산 프로젝트 거래 제한	제재 대상 러시아 에너지 기업이 33% 이상 지분을 보유하고 있거나 50% 이상 의결권을 보유하고, 추진하는 러시아 영해 내의 심해(deepwater), 북극해안(Arctic offshore), 셰일(shale) 석유 개발·생산 프로젝트에 대하여 상품·서비스(금융 서비스 제외), 기술이나 장비의 대러시아 수출 금지
	방위산업 부문	군수물자로 사용될 수 있는 화학물질, 전자부품 등의 대러시아 수출 제한
특정 지역과의 교역 및 투자 제한	러시아 합병 크림 반도	크림 반도에 위치한 크림공화국과의 교역 및 투자 제한

자료: 「미국의 대러시아 경제제재와 한국기업의 대응방안」, 류혜정, 『수은해외경제』 2018년 겨울호 등 참고 작성

### 대러 제재의 외국기업에 대한 영향

- 미국의 경우, 대러 제재는 기본적으로 미국인 또는 미국 내에서 이루어지는 거래에 대해 적용되었으나, 2014년과 2017년에 각각 2차 제재의 근거가 되는 법이 발표됨.
- 2014년 12월에 공표된 미국의 우크라이나 자유지원법(Ukraine Freedom Support Act)은 2차 제재를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행정명령의 부재로 시행은 유보되었음.<sup>3)</sup>

3) 「미국의 대러시아 경제제재와 한국기업의 대응방안」, 류혜정, 『수은해외경제』 2018년 겨울호.





<표 6> 미국의 대러 2차 제재 관련법

시기	제재 관련법 명칭	내용	2차 제재 관련
2014.12.18.	우크라이나 자유지원법 (Ukraine Freedom Support Act)	러시아 군수물자, 에너지, 금융 부문 등의 기업을 지원하는 외국 기업 및 금융기관 제재	법적 근거 제공(행정명령 부재로 시행은 유보)
2017.8.2. (2018.1.29. 발효)	미국의 적국에 대한 제재를 통한 대응법 (Countering America's Adversaries Through Sanctions Act, CAATSA)	기존 금융 및 에너지 관련 제재 강화/복합, 러시아, 이란에 대한 통합적 제재 (외국기업의 파이프라인 개발 투자 및 지원, 국유자산 민영화 참여 제한 등 포함)	- 우크라이나 자유지원법 수정 (외국인 또는 외국기업에 대한 2차 제재의 구체적 기준 제시) - 2차 제재 대상 부문 추가

자료: 「미국의 대러시아 경제제재와 한국기업의 대응방안」, 류혜정, 『수은해외경제』 2018년 겨울호 등 참고 작성

-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2017년 8월의 '제재를 통한 미국의 적국에 대한 대응법 (Countering America's Adversaries Through Sanctions Act, CAATSA)' 발표로 외국기업에 대한 2차 제재를 발효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됨.
- CAATSA에 의하면, 제재 대상인 러시아의 방위산업 및 에너지 부문 기업을 대리하거나 이를 위하여 상당한 규모의 금융거래를 용이하게 한 외국금융기관, 외국기업, 외국인에 대해 제재가 부과될 수 있음.
- **주요 2차 제재의 사례: ExxonMobil**
- 2017년 8월 20일, 미국 재무부는 2014년 5월에 제재 대상인 로스네프트와 에너지 개발 관련 합의를 체결한 석유메이저 ExxonMobil에 대해 200만 달러의 제재금을 부과하였음. 이후 ExxonMobil은 미국 법원에서 재무부와 소송을 진행하고 있음.<sup>4)</sup>
- 한편, ExxonMobil은 2017년 말 로스네프트와 논의해 왔던 10여개의 공동 개발 프로젝트 참여 의사를 철회한 바 있음.

## 2. 러시아의 대응 제재

### 러시아의 대서방 대응 제재의 내용

- (개인에 대한 제재) 러시아 정부는 서방의 대러 제재에 대응하여 2014년 3월 미국 상원 의원 등을 비롯한 서방 정치인에 대한 제재를 발표함.
- (수입 제한) 2014년 8월 '러시아 연방의 안전보장을 위한 특별경제조치 시행'에 대한 대통령령 발표로 대러 경제제재 부과국의 특정 농산물, 식료품의 수입을 금지함.<sup>5)</sup>

4) www.vestifinance.ru





<표 7> 러시아의 대서방 제재의 대상과 주요 내용

제재 일시	제재 대상국	주요 내용
2014.3월	미국 상원의원, 미국 대통령 보좌관 등	러시아 내 입국 불가
2014.8월	EU, 미국,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노르웨이 등	농산물 및 식료품 수입금지 조치
2015.8월	알바니아, 몬테네그로,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우크라이나	농산물 및 식료품 수입금지 조치(제재 대상 국가 추가)
2018.6월	미국 및 기타 국가	일부 산업(원자력, 항공, 로켓 및 엔진, 컨설팅 및 회계감사, 법적 서비스 등)협력 중단
2018.11월	우크라이나	러시아 내 현금자산, 부동산 동결, 러시아 내 자금 이체 금지, 322명의 개인과 68개 단체 제재

자료: <https://www.kommersant.ru>; <https://tass.ru>

- (제재대응법) 2018년 6월 푸틴 대통령의 서명으로 '미국과 기타 외국의 비우호적 행위에 대한 보복 조치'에 관한 연방법이 발표됨.<sup>6)</sup>
- 러시아의 대응제재는 대러 제재에 참여하고 있는 국가 또는 비우호적 국가의 직·간접적인 통제하에 있거나 이들과 특수관계에 있는 기관을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음.

5) О мерах по реализации Указа Президента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от 6 августа 2014 г. № 560 "О применении отдельных специальных экономических мер в целях обеспечения безопасности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러시아 연방의 안전보장을 위한 특별경제조치 시행"에 관한 대통령령) ([static.government.ru](http://static.government.ru))

6)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т 04.06.2018 г. № 127-ФЗ: О мерах воздействия (противодействия) на недружественные действия Соединенных Штатов Америки и иных иностранных государств ("미국과 기타 외국의 비우호적 행위에 대한 보복 조치"에 관한 연방법) ([kremlin.ru](http://kremlin.ru))



### Ⅲ. 대러 제재 시행과 러시아 경제 변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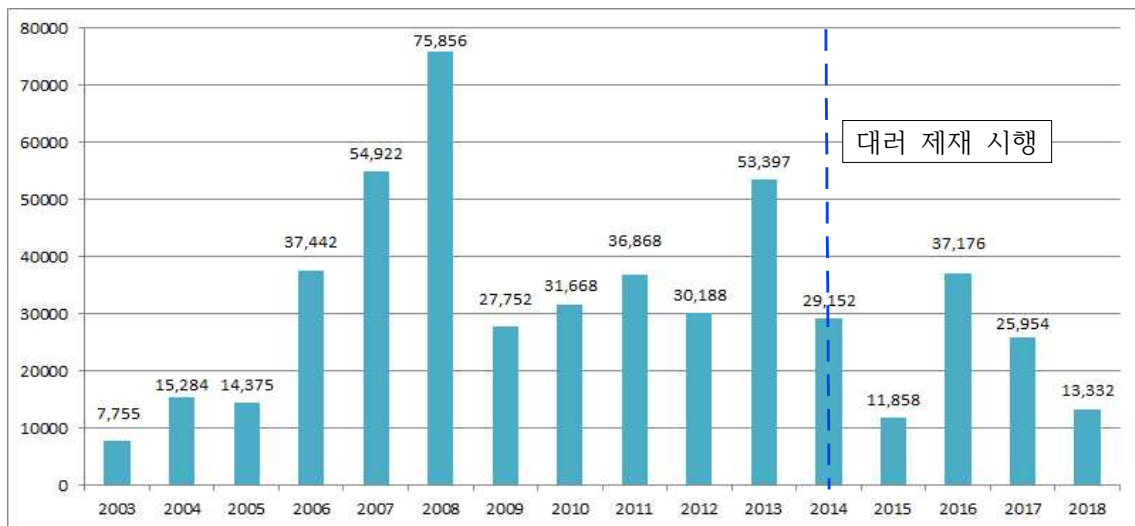
#### 1. 대러 제재 시행 이후 외국인직접투자 및 금융시장 변동

##### 외국인직접투자 감소 추세

- 서방의 대러 제재 시행 이후, 2015년 러시아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 규모는 급격히 감소하였으며, 2016년 다소 증가하였으나, 2017~18년에는 다시 감소함.
- 대러 제재 시행 이후의 이러한 외국인직접투자 규모의 변동은 세계 경기침체와 대러 제재의 영향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평가됨.
-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직접투자의 구성을 보면 재투자가 같은 규모가 유지되고 있는데 비해 지분투자가 감소하고 있으며, 이는 대러 제재에 따른 영향으로 외국투자자들이 보유 지분을 매각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그림 1> 러시아의 직접투자 유입액

단위: 백만 달러



자료: UNCTAD



<그림 2> 러시아의 외국인직접투자 구성

단위: 억 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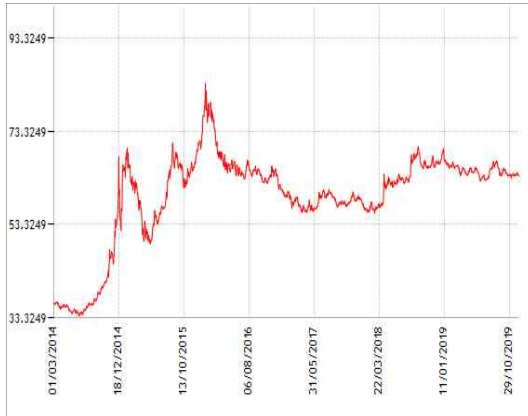
자료: UNCTAD

### 대러 제재의 러시아 금융시장에 대한 영향(2019.03~2019.11)

- 2014년 3월의 대러 제재 시행으로 러시아의 금융시장은 주가, 국채이자율 등이 급격히 변동하였으며, 2016년 국제유가가 상승 추세를 보이며 러시아 경제가 회복됨에 따라 안정되는 양상을 나타냄.
- 주식시장의 RTS 지수는 대러 제재 시행 이후 점차 하락하여 2015년 말 760으로 최저지수를 기록한 이후 반등하여 점진적으로 상승세를 보여 2019년 11월 말에는 1,438을 기록하였음.
- 10년 만기 국채금리는 2014년 말 13.11%로 최대치를 기록하였으며, 이후 러시아 경제의 호전에 따라 하락하여 2019년 11월 말 6.45%를 기록하고 있음.
- CDS 프리미엄은 2014년 중반 이후 급격히 상승하여 2015년 1월 말 630bp를 기록하였으며, 이후 하락세를 보였음.



<그림 3> 루블화 환율 변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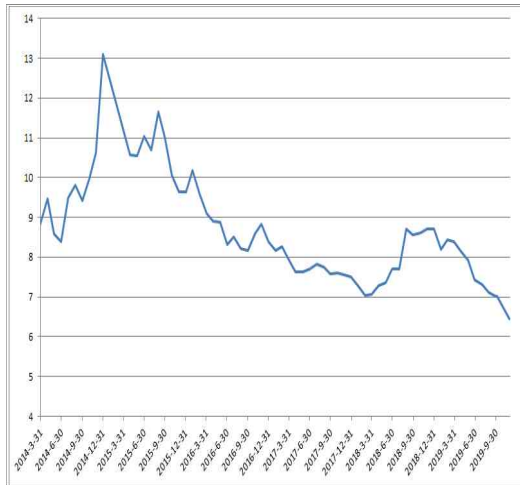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그림 4> 주식시장의 RTS 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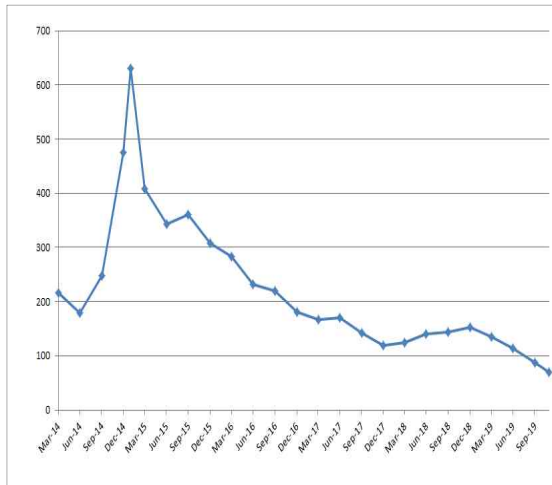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그림 5> 국채금리(10년)



자료: Bloomberg

<그림 6> CDS 프리미엄



자료: Bloombe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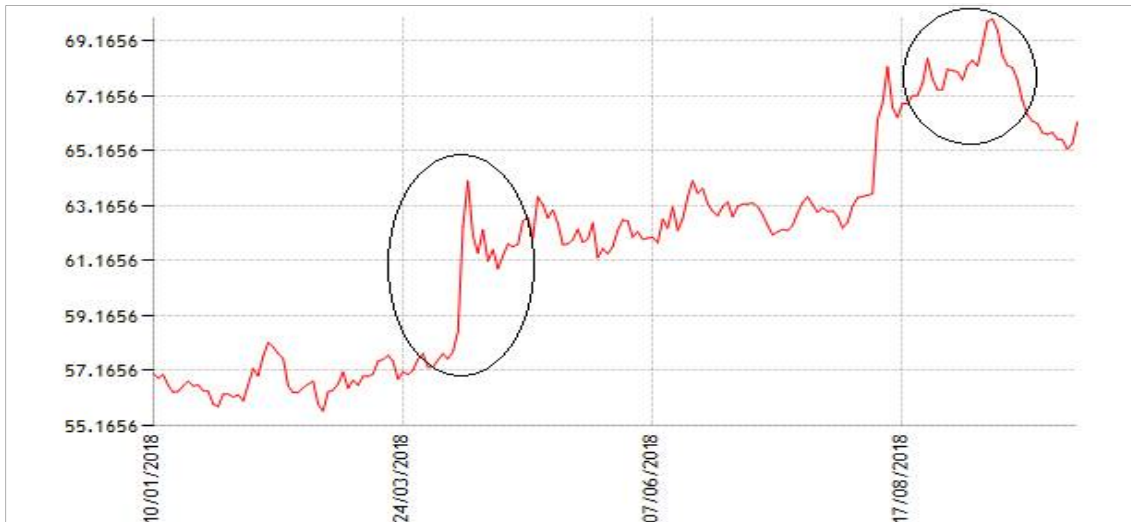
- 루블화 환율은 대러 추가 제재 시행시 단기에 급격한 변동을 보이며 취약성을 나타내고 있음.
- 루블화 환율은 대러 제재와 2014년 11월 변동환율제 도입의 영향으로 2014년 9월부터 2016년까지 급격히 상승하였으며, 이후 다소 안정세를 나타내고 있음.
- 연도별 평균 미 달러당 환율은 2014년 38.38루블에서 2015년 60.94루블, 2016년 67.06루블로 급격히 상승하였으며, 이후 점차 하락하여 2017년 58.34루블, 2018년 62.74루블을 기록하였음.
- 루블화 환율은 2018년 4월 6일의 제재(기존의 제재 대상에 7명의 기업인과 12개 기업, 17명의 고위 관료 추가)와 8월 27일의 제재(1991년 생화학무기 통제 및 전쟁종식법(CBW Act)에 따른 신규 제재) 이후 급격히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는 등 추가 대러 제재에 영향을 받고 있음.



※ 달러당 환율은 2018년 4월 6일 제재 발표 후 6일 57.58루블에서 12일 64.06루블로 11.3% 상승한 데 이어 8월 27일 제재 발표 후 28일 67.39루블에서 9월 12일 69.97루블까지 상승하였으며, 이후 점차 하락하여 10월 5일 66.2루블을 기록함.

<그림 7> 2018년 대러 제재에 따른 러시아 환율의 변동

단위: 달러당 루블



자료: 러시아 중앙은행

## 2.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에 대한 대러 제재의 영향

### 대러 제재는 러시아의 자원 개발에 대한 외국기업의 참여에 영향

- ExxonMobil, Total, Shell 등이 러시아 에너지 부문에 대한 투자를 중단 또는 연기하였음.
- (ExxonMobil) 2012년 이후 ExxonMobil은 로스네프트와 공동으로 북극해와 흑해에서 약 5,000억 달러 규모의 에너지 개발 프로젝트를 추진해 왔으며, 양측이 다수의 프로젝트에 대한 합의문에 서명하였음. 그러나 서방의 대러 제재 이후, ExxonMobil이 30%의 지분을 보유한 사할린-1을 제외한 대부분의 에너지 개발 프로젝트 추진이 중단됨.
- (Total) Total은 2015년 5월 루코일과의 합작으로 추진 중이던 서시베리아 가스전 개발을 중단하였으며, 6월에는 가스프롬과 합작으로 진행하던 바렌츠해의 쉬토크만 가스전 개발 사업도 중단하였음.<sup>7)</sup> 또한, 제재의 영향으로 2016년 8월에는 시베리아 네네츠 자치구 유전개발회사의 지분을 러시아 기업에 매각한 바 있음.<sup>8)</sup>
- (Shell) Shell은 2014년 10월 한티만시스크 자치구에서의 가스프롬네프트와의 세일오일 개발 합작투자를 중단하였음.<sup>9)</sup>

7) www.finanz.ru

8) www.vedomosti.ru



- 이외에 북극해 등 지역에서의 자원 개발에 필요한 서방 기업의 기술이나 첨단 장비가 제재로 인해 제공될 수 없어 에너지 개발에 차질이 빚어졌음.
- 특히, 러시아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던 야말 LNG-1 개발 사업의 경우 서구 에너지 기업들이 참여 의사를 철회하여 사업 추진이 중단될 상황이었으나, 중국 기업이 참여하여 프로젝트가 완성됨.
- **러시아가 추진하는 대규모 프로젝트에 대한 금융지원이 제한됨.**
- 가스프롬의 '시베리아의 힘'(Power of Siberia) 가스관 건설과 신규 가스전 개발, 노바텍의 야말 LNG 프로젝트 등에는 막대한 투자자금이 필요하나, 미국과 EU로부터의 자금조달 제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이에 러시아 정부는 야말 LNG 사업을 위해 국부펀드를 통해 1,500억 루블(약 25억 달러)의 자금을 지원한 바 있으며,<sup>10)</sup> 중국 등과 금융협력을 추진함.

### 3. 제재 이후 러시아 경제 변동에 영향을 준 요인들

#### 러시아 경제는 국제유가 변동에 큰 영향을 받으며, 2016~18년 국제유가 회복으로 플러스 경제성장 기록

- 국제유가 하락으로 2015년 -2.3%의 마이너스 성장에 그쳤던 러시아 경제는 2016~18년 국제유가가 회복세를 보이면서 2016년 0.3%의 플러스 성장을 회복한 데 이어 2017년과 2018년에도 각각 1.5% 및 2.3%의 플러스 성장을 기록하였음.
- 러시아의 전체 수출에서 원유의 수출이 점유하는 비중은 지난 10년 간 29~36%을 기록하였음. 이에 따라 국제유가 변동은 러시아의 수출에 가장 크고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물론 경제성장률도 좌우하고 있음.
- 따라서 2014년 이후의 러시아 경제성장률 변동은 서방의 대러 제재와 함께 국제유가의 변동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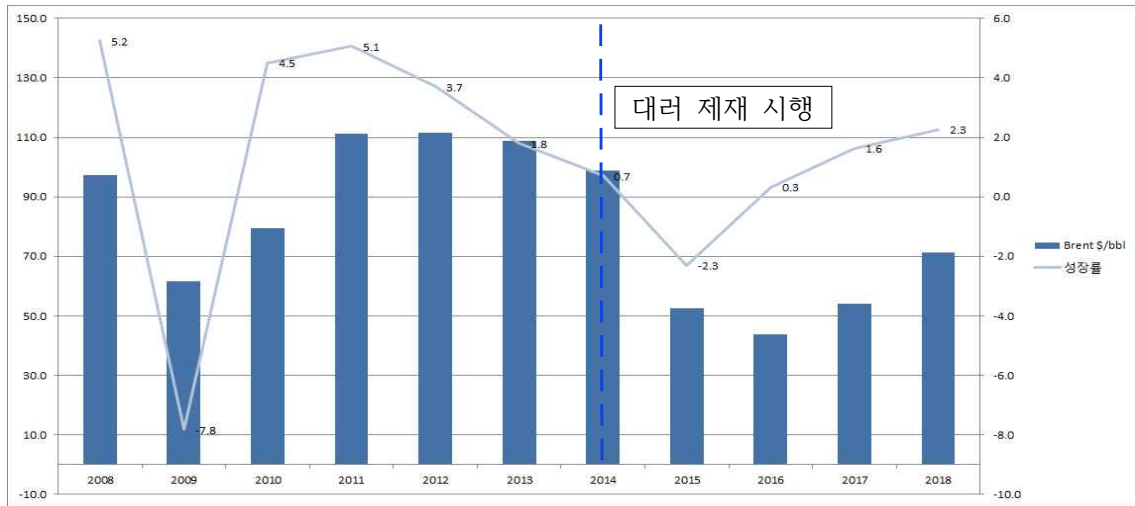
9) www.znak.com

10) ria.ru



<그림 8> 국제유가와 러시아 경제성장률 변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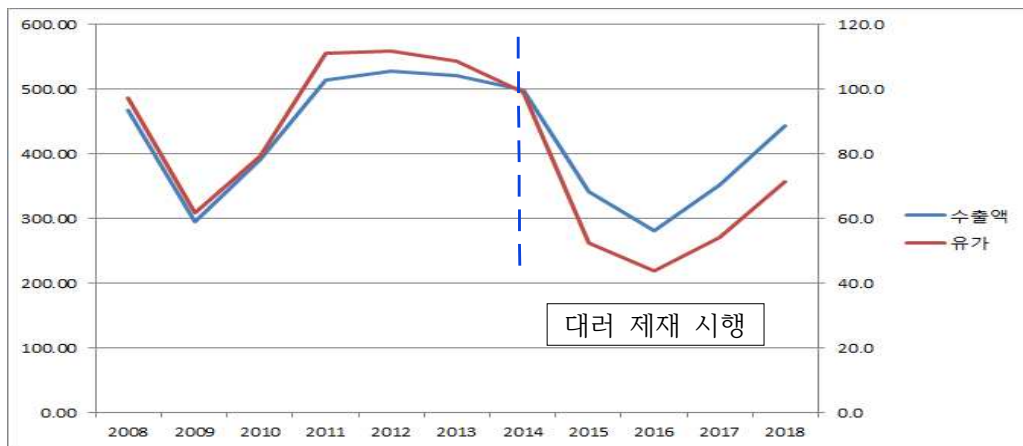
단위: 달러/배럴, %



자료: BP; WEO

<그림 9> 국제유가와 러시아 수출규모의 변동

단위: 십억 달러(수출액(왼쪽)), 달러/배럴(유가(오른쪽))



자료: IHS





<표 8> 러시아 상품수출에서 원유수출이 차지하는 비중(2009~18년)

단위: 백만 달러, %

연도	상품수출(A)	원유수출(B)	
		원유수출(B)	원유수출 비중(A/B)
2009년	297,155	100,593.2	33.9
2010년	392,674	135,799.3	34.6
2011년	515,409	181,812.4	35.3
2012년	527,434	180,929.7	34.3
2013년	521,835	173,668.3	33.3
2014년	496,806	153,895.5	31.0
2015년	341,419	89,587.7	26.2
2016년	281,709	73,712.6	26.2
2017년	353,102	93,377.2	26.4
2018년	443,130	129,201.4	29.2

자료: 러시아 중앙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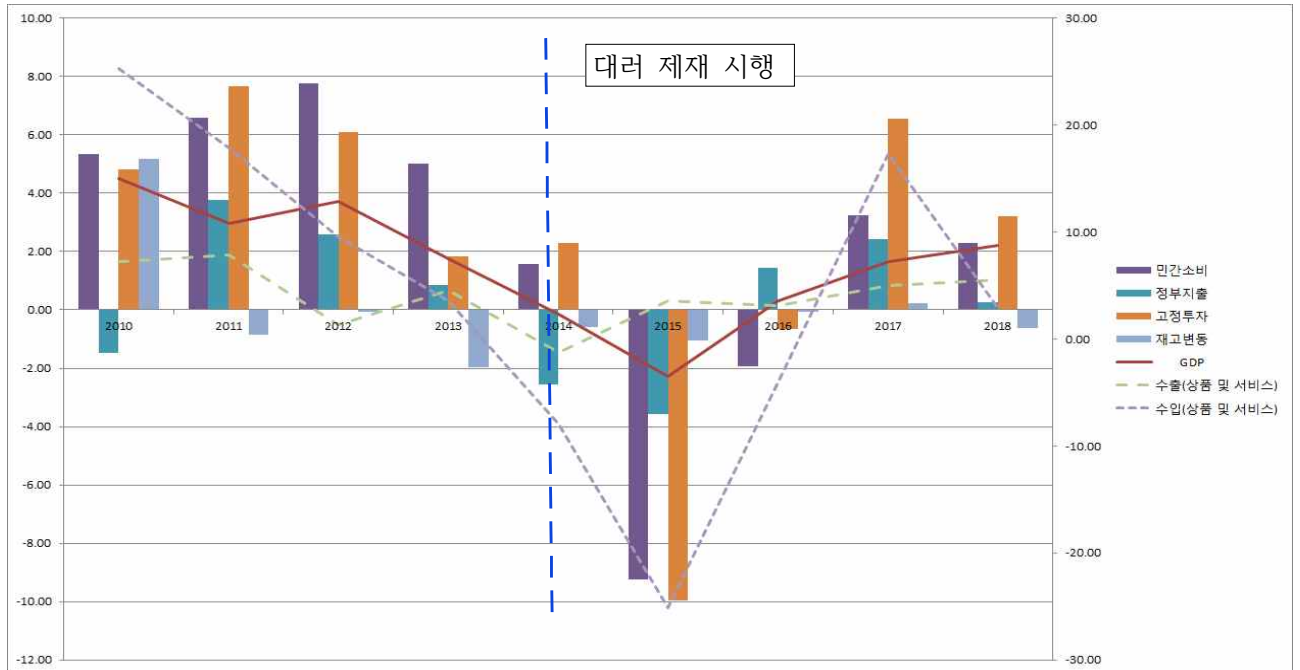
### 2014~2018년 시기별 러시아 경제성장률과 GDP 구성부문의 변동

- 2014~15년 경기 둔화 : 대러 제재 시행과 국제유가 하락의 복합적 영향으로 환율 상승, 소비·지출·투자 감소
  - 이 시기 러시아 경제 하락은 대러 제재 시행과 유가하락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이며, 환율은 크게 상승하고 소비, 지출 및 투자 등이 동시에 크게 감소하였음.
- 2016~18년(상반기) 경기 회복 : 국제유가 상승으로 환율 하락, 민간소비 증가
  - 이 시기에는 제재가 지속되는 가운데 국제유가 상승으로 환율이 하락하고 민간소비가 증가하며 경기가 회복되었음.
- 2018년(하반기) 이후 경기 둔화 : 국제유가 하방 안정으로 환율은 강보합세, 정부지출 감소, 민간소비 및 고정투자 증가
  - 이 시기에는 국제유가가 다시 하방 안정세를 보이는 가운데 환율은 강보합세를 기록했으며, 정부지출은 감소하고 고정투자는 증가하였음.



<그림 10> 러시아 경제성장률 및 GDP 구성 항목의 증가율

단위: %(GDP 성장률 및 구성항목(왼쪽), 수출 및 수입변동률(오른쪽))



자료: IHS

<표 9> 제재 이후 러시아 경제와 유가, 환율의 변동

시기	경제성장세	유가	환율	GDP 구성 변동
2014~15년	둔화	하락	상승	소비·지출 감소
2016~18년(상반기)	회복	상승	하락	소비 증가
2018년(하반기)~현재	둔화	하방안정	강보합	지출 감소, 소비·투자 증가

- 전반적으로 러시아 경제는 국제유가의 변동에 크게 영향을 받으며, 대러 제재의 시행은 단기에 러시아의 외국인직접투자 유입 및 금융시장 등에 상당한 수준의 영향을 준 것으로 평가됨.



## IV. 러시아의 대응과 향후 전망

### 경제 및 산업정책을 통한 대응

- 경제정책: 제재 시행 이후, 러시아 정부는 변동환율제를 도입하고, 기준금리 조절을 통해 소비자물가상승률 상승에 대응하였으며, 외환보유액 중에서 금 보유 비중을 증대하는 등의 정책을 시행하였음.
  - 서방의 대러 제재 이후 2014년 4월부터 루블화 환율 상승이 지속되는 가운데 환율 방어에 어려움을 겪게 되자 러시아 중앙은행은 2014년 11월에 변동환율제를 도입하였음.
  - 이후 환율 상승에 따른 소비자물가상승률 상승에 대응하기 위해 기준금리를 급격히 인상하였음(2014년 12월 기준금리를 기존의 10.5%에서 17%로 대폭 상향 조정).
  - 또한 외환보유액 가운데 안전자산인 금의 보유비중을 2014년 12월의 12%에서 2019년 11월에는 19.5%로 크게 늘렸음.
- 수입대체정책: 러시아 정부는 서방의 제재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에너지 개발 및 첨단제품의 개발과 생산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하고 수입대체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러시아 에너지부 노박 장관과 산업통상부 만투로프 장관은 2015년 3월 개최된 제3회 '국가 석유 및 가스 포럼'에서 향후 석유 및 가스 부문의 수입 비중을 기존의 60%에서 2020년에는 43%까지 줄이는 내용의 수입대체 정책을 발표한 바 있음.<sup>11)</sup>
- 이외에도 정부는 제재 대상 국영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제공하고 있음.
  - 2014년 말 제재로 인해 해외로부터의 자금 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바텍에 대해 국부펀드인 국가복지기금에서 1,500억 루블(약 25억 달러), 국영은행인 스베르뱅크와 가스프롬뱅크가 36억 유로(약 42.4억 달러)를 지원한 것 등이 대표적인 사례임.<sup>12)</sup>

### 대외경제협력을 통한 대응: 중국·일본과의 협력

- 중국과의 협력 : 중국의 북극해 LNG 프로젝트 투자, 러-중 투자펀드 설립 등
  - 중국은 러시아가 서방의 제재로 인해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북극 야말 LNG-1 사업에 금융지원을 실시하고 대신 동 프로젝트의 지분을 확보하였음.
  - 중국의 국영 에너지기업인 중국석유·천연가스공사(CNPC)가 서방 제재 시행 전인 2014년 1월 20% 지분을 확보한 데 이어, 제재 시행 후인 2016년 중국의 실크로드펀드에서 10억

11) <https://energyforum.ru>

12) [ria.ru](http://ria.ru)



8,700만 유로에 야말 LNG 9.9%의 지분을 확보하였음. 아울러 실크로드펀드에서 야말 LNG 사업 지원 목적으로 노바텍에 7억 3,000만 유로 규모의 자금을 15년 간 장기 대출 하였음.

※ 현재 야말 북극 LNG-1 프로젝트의 지분율 : 노바텍 50.1%, 프랑스 Total 20%, 중국 CNPC 20%, 중국 실크로드펀드 9.9%

- 중국은 러시아의 북극 LNG-2 프로젝트에도 금융지원을 제공하고 있음. 이 프로젝트는 노바텍이 60%, 그리고 프랑스 Total, 중국 해양석유총공사(CNOOC) 및 석유국제탐사개발공사(CNODC), 일본 미쓰이 물산이 각각 1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음.
- 2012년 6월 러시아 직접투자펀드(RDIF)와 중국투자공사(CIC)가 공동으로 20억 달러 규모의 러시아-중국 투자펀드(Russia-China investment fund)를 조성하였음. 이 펀드는 에너지 및 농업 등의 부문에서 러시아 및 CIS 지역에 대해 70%, 중국에 대해 30%의 비중으로 투자를 추진하고 있음.<sup>13)</sup>
- 
- **일본과의 협력 : 일본의 북극해 LNG 투자, 러-일 투자펀드 설립 등**
- 일본은 북극 LNG-2 프로젝트에 투자하여 미쓰이 물산이 10%의 지분을 확보하고 있음.
- 또한 일본국제협력은행(JBIC)은 2016년 북극 LNG-1 프로젝트에 서방의 대러 제재 실행 이전에 합의된 2억 유로의 수출자금을 제공하기도 하였음.
- 2017년 8월 RDIF와 JBIC이 공동으로 10억 달러 규모의 러시아-일본 투자펀드(Russia-Japan investment fund)를 조성하였음. 이 펀드는 러시아의 산업다변화 추진과 극동러시아 지역의 수출전진기지 발전 및 에너지 부문 등에서의 협력을 지원하게 됨.<sup>14)</sup>
- 아울러 러시아는 서방의 제재에 대응하여 비서방 국가들인 인도, 베트남 및 중동 국가들과도 경제협력을 적극 추진하고 있음.

## 향후 서방의 대러 제재 전망

- 서방의 대러 제재 해제 조건인 크림 반도의 우크라이나 반환,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에 대한 러시아의 지원 중단 등은 러시아가 받아들일 가능성이 낮으며, 제재 해제는 향후 서방과 러시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정치·외교적 합의에 따라 가능할 것으로 전망됨.
- 올해 집권한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와의 대화에 적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어 양국이 합의에 도달할 가능성이 있음.
- 푸틴 대통령과 젤렌스키 대통령은 2019년 12월 9일 프랑스 파리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2019년 말까지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에서의 전면 휴전과 추가 포로 교환에 합의하였음.

13) rcif.com 러시아-중국 투자펀드

14) rjif.org 러시아-일본 투자펀드



나, 동부분리 지역에 대한 자치권 부여 등 핵심 쟁점의 경우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음.

- 이번 정상회담은 2014년 러시아의 크림 반도 병합 이후 처음으로 개최되었으며 양국은 4개월 뒤에 다시 정상회담을 갖고 분쟁해결을 위한 추가 방안을 도출하기로 합의하였음.

### 대러 제재가 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

- (대러시아 투자) 한국은 공식적으로 대러 제재에 동참하고 있지 않으나, 미국의 2차 제재에 따라 제재대상 기업이 지분을 보유한 투자 프로젝트 등의 참여에 영향을 받고 있음.  
 ※ 서방의 대러 제재는 미국의 경우 기본적으로 미국 내에 설립된 미국 기업에 대해 시행되고 있으나, 미국은 2차 제재를 통해 외국 기업의 거래에도 제재 시행을 추진함.
- (대러시아 금융협력) 2차 제재의 영향을 받아 제재대상인 러시아 금융기관과의 금융협력에 영향을 받고 있음. 수출입은행의 경우 제재대상 은행과의 전대 금융협력이 제한됨.
- (대러시아 교역) 대러시아 교역 제재는 에너지 개발 장비, 군수품 등 전략물자 또는 크림 공화국과의 교역 제한 등이므로 기존의 양국 주요 교역상품이 에너지 자원(러시아 수출),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한국 수출) 등인 것을 고려할 때 한국의 대러시아 교역에 대한 큰 영향은 없음.

<표 10> 외국기업에 대한 2차 대러 제재의 주요 내용

2차 제재 부문	2차 제재 내용	러시아와의 협력에 대한 영향
금융거래	금융기관, 에너지, 방위산업 부문에 대한 자산 동결 및 금융거래 차단	<b>제재 대상</b> 금융기관이나 에너지 및 방산기업에 대한 금융제공 제한
투자	러시아 심해 및 북극해 지역에서의 석유 및 셰일 오일 개발 참여 제한	<b>제재 대상</b> 에너지 기업이 추진하는 북극해 석유 및 셰일 오일 개발 참여 제한
교역	에너지 및 군수 관련 품목에 대한 교역 통제	에너지 개발을 위한 기술 및 첨단 설비의 교역 제한, 군수물자 교역 제한



< 참 고 문 헌 >

류혜정. 「미국의 대러시아 경제제재와 한국기업의 대응방안」. 『수은해외경제』 2018년 겨울호.

UNCTAD

Central Bank of Russia

British Petroleum(BP)

IMF, World Economic Outlook(WEO)

Bloomberg

IHS

<https://www.kommersant.ru>

<https://www.rt.com>

<https://www.finanz.ru>

<http://kremlin.ru>

<https://www.vestifinance.ru>

<https://www.vedomosti.ru>

<https://www.znak.com>

<https://ria.ru>

<http://rcif.com> 러시아-중국 투자펀드

<http://rjif.org> 러시아-일본 투자펀드

О мерах по реализации Указа Президента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от 6 августа 2014 г. № 560 "О применении отдельных специальных экономических мер в целях обеспечения безопасности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러시아 연방의 안전보장을 위한 특별경제조치 시행"에 관한 대통령령) <http://static.government.ru>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т 04.06.2018 г. № 127-ФЗ. О мерах воздействия (противодействию) на недружественные действия Соединенных Штатов Америки и иных иностранных государств ("미국과 기타 외국의 비우호적 행위에 대한 보복 조치'에 관한 연방법) <http://kremlin.ru>